

## [기출을 통해 알아보는, 법 지문의 독해 Point]

### 1. 법의 목적을 파악한다.

법의 목적은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고, 뒤에 나오는 원칙/예외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2206의 베카리아 지문은 서두에서 '형벌'의 목적을 정확하게 잡고 시작했으면 쪽 끝고 나가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해당 문단에서 '논증'의 전제인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근거로, '자유를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를 누리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때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는 '법'의 목적은 인간이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죠.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독해했다면, 아래의 문단에서 '형벌이 가하는 손해

가 조금만 커도 되는 이유', '울타리의 높이를 다르게 해야 하는 이유', '성문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 등이 모두 '인간이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목적을 기반으로 깔끔하게 연결되며 이해됩니다.

목적은 독해하는 이유가 마냥 지문을 잘 읽는 데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독해 포인트는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됩니다. 밑줄을 긋고 ㉣의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법 지문에서 나온다면 대부분은 법의 목적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출제되었던 사례로는 2309의 유류분이 있습니다.

### 1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결국 유류분의 목적을 묻고 있었는데, 이 이유는 ㉣ 주변이 아닌, 서두의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를 파악했던 사람과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 문제를 푸는 속도에 큰 차이가 있었겠죠.

## 2. 상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

계약 등을 다루는 지문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독해 포인트입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나오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의무 등이 등장하는데, 이때 해당 권리/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주체의 명칭이 무엇인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념이 주어진 후, 예시에서 해당 내용이 연결된다면 각 사람(갑, 을 병/A, B, C..)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1909 CDS 프리미엄 지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을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별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해당 문단에서 채권 발행자, 채권 투자자,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의 관계가 정리되었나요? 그리고, 이를 갑, 을, 병과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었나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를 보기 좋게 여백에 도식화하여 정리합니다.



글자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TTTT 이렇게 3자간의 상호관계와 주체의 명칭, 그리고 주고받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시가 나오면 예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주체인지 반드시 파악하셔야 하고요. 이 작업은 지문 뿐만 아닌 <보기> 문제 등에서 새로운 사례가 나오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 3. 법률의 조항은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여 독해한다.

법률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건(p)이면 효과(q)이다.'와 같이 구성됩니다. 이는 가장 최근에 출제된 법 지문이었던 2311에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죠.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지문을 독해할 때,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독해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칙과 예외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인데, 일반적으로 원칙이 아닌 '예외' 상황이 나왔을 때 요건, 또는 효과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외 상황은  $p \rightarrow \sim q$ ,  $\sim p \rightarrow q$ 와 같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처음 조항이 나올 때부터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하며 읽으면 이후의 독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009의 점유/소유 지문을 읽으며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설'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해당 문단에서, 요건과 효과를 구분해봅시다. 우선 효과는 '물건의 소유권 양도'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이루기 위한 '요건'은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는 것/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는 것/소유권 양도를 공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며 독해하였으면 아래의 '예외' 상황이 왜 '예외'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를 공시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세 가지 요건 중 '유효한 계약'과 '공시'는 이루어졌지만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소유권의 취득'은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경우는  $\sim p \rightarrow q$ 의 구조를 가진 예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비교-대조하며 독해하면 문제를 훨씬 체계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 4. 경우는 정확하게 구분하며 읽는다.

최근 나오는 지문들 중 경우를 구분하며 읽어야 하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원칙과 예외, 또는 대비되는 두 대상이 나올 때 정확하게 각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분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독해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해당 부분이 보기 문제 등에서 주요한 출제 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예시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2311의 한 부분입니다. 이 문단에서, 손해 배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케이스를 분류하며 정리했어야 하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정해진 경우/위약벌임이 증명된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액수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없는지 정리하며 읽으셨어야 합니다.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손해 배상 예정액 X	손해 배상 예정액 O	위약벌
금액	<증명될 경우> 손해 배상액	손해 배상 예정액	위약벌 + <증명될 경우> 손해 배상액
감액 의 여부	X	O	X

실전에선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필요까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정리는 하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 분류를 잘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아래의 문제입니다.

12.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가)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나)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

(단, 위의 모든 상황에서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5. 예시는 제시된 개념에 정확하게 연결하여 읽는다.

추상적인 법학적 개념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에, 개념이 나온 뒤에 예시를 통하여 부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제자가 개념에 예시를 덧붙여 주는 것은 해당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Signal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예시 부분에 나오는 각각의 대상들을 개념에 하나하나 연결해가며 독해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체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원칙과 예외의 사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까지 생각하면서 읽으시는게 좋습니다. 예시를 통해, 개념을 예시에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아까 함께 살펴봤던, 2009 점유/소유 지문의 요건-효과 뒷부분입니다. A와 B를 위의 개념과 유기적으로 연결해보면, A는 양도인이 되고 B는 양수인이 됩니다. 이때, 피아노의 소유자인 A가 양도인이 되고, 유효한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B의 간접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공시되므로 요건 3가지가 충족되었고, 그렇기에 양수인인 B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예시에 나오는 상황과 연결하며 읽으면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법학 지문에서 반드시 유의하며 읽어야 할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본격적인 연계 학습으로 넘어가기 전, 기출 지문들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면서 태도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계 지문의 출제 포인트들을 살펴봅시다.